

선거제 개혁 합의했지만... 1월 처리 '힘로'

모호한 합의내용에 시간 빠듯 의원정수 등 각당 의견 첨예 심상정 "이달중 개혁안 마련"

여야 5당이 지난 15일 내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합의만 한 데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각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이견을 좁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의 단식 농성을 불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정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다.

그러나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 도입 '100% 연동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전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으로서 비례대표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부적인 의견이 더 많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을 조정해 마찰을 가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비례대표는 늘리고 지역구 의석은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축소 문제는 현역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의원들의 '갑그릇'이 달린 만큼 간단히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의원정수 문제는 각 당의 입장차는 물론 국민 여론까지 고려해야 한다. '10% 확대'에 합의하면 국회의원의 정수는 현재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어난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도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달 초 새해 예산안 협상과 함

께 진행될 선거제 개혁 협상에서 한국당은 노동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여야 5당은 이처럼 산적한 쟁점들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사실상 공을 쟁개투위로 넘겼다. 선거제 개혁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활동시한도 연장된 만큼, 쟁개투위는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까지 쟁개투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쟁개투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주부터는 1소위를 주 3회씩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며 "쟁개투위의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들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으로 제시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이정미 단식 중단... "이제 하고비 넘어"

야3당 불꽃집회는 예정대로

여야의 선거제 개혁 합의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15일 단식을 중단했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째 이어 온 단식 농성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6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손 대표는 농성 해단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정권 교체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가 개혁의 중심이 되고 내각이 역할을 발휘하는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의 기초"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선거제 개혁 협상에 참여한 야 3

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만, 야 3당은 여야 5당의 합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불꽃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손 대표는 "열을 동반 단식하고 어렵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쟁취했지만, 투쟁은 지금부터"라며 "갈 길은 끝없이 남아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안어내 촛불혁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일단 고비 하나는 넘겼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률로 못 박힐 때까지 싸움은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靑, 前 특감반원 '우윤근 의혹' 주장 강력 반박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 흐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 대응을 나섰다. 우윤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5일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근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김 씨) 본인의 비위를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

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윤근 의혹은 이미 6년 전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16일 "청와대가 진흙탕 같은 진실게임 뒤에 숨어 의혹이 잠잠해지지만 기대한 다면 국회가 나서 특검과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떠오르는 것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불거진 '심상식' 문건 파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현재 대검 감찰본부에서 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채용비리·유치원법·탄력근로제... 문 연 12월 임시국회 쟁점 수두룩

여야 쟁법 제각각 진통 예고

여야가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선정에 합의했지만, 쟁점들에 대한 입장차는 크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계획과 탄력근로제 단행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 처리를 합의했다.

그러나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주요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충돌이 이어지는 등 연발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문제는 갈등의 핵으로 꼽힌다.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낚낱이 밝혀겠다고 버리고 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당연히 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해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논의 시점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생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교비 유용 시 처벌 조항 마련과 국가관리로의 회계 일원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 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태세를 보인다.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큰 어려움 없이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준안 표결과 관련, 민주당으로서서는 부결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달 중 '원포인트 분회'를 열어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분회의 날짜는 논의해야 할 현안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26일이나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비대위 현역의원 21명 물갈이

김무성·최경환·홍문준·김용태... 친박 12·비박 9명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현역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협위원장 교체제를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물론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도 각종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김무성·원유철·최경환·김재원·이우현·염용수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당협위원장이 김정훈·홍문준·권성동·김용태·윤상현·이근현·이종구·황영철·홍일표·홍문표·이완영·이재·곽상도·윤상장·정중섭 의원 등 15명의 현역

의원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전체 112명 의원 기준으로 이번 인적쇄신 대상에 포함된 현역의원은 18.8%에 달한다.

이 가운데 김무성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최경환·홍문준·윤상현 의원 등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힌다. 계파별로 친박계 내지 잔류파로 분류되는 의원은 원유철·김정훈·최경환·홍문준·김재원·윤상현·이완영 의원 등 12명이다. 또 비박계 내지 북망파는 김무성·권성동·김용태·이종구·이근현·이재·황영철·홍일표·홍문표 의원 등 9명이다. 특히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적쇄신을 주도한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번 교체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 현역의원 교체대상이 예상보다 세 개파 간 갈등을 비롯해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7846	1	여주시 신원동 171-5 618㎡ [유동화,이지은,이병훈,오대경,오대훈지분각3090분의49전부]	전	11,466,000 11,466,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매각제외제외건물임수득있음
	2	동소 170-2 83㎡ [유동화,이지은,이병훈,오대경,오대훈지분각415분의1전부]	대	275,000 275,000	물건번호1과비고 동일
	3	동소 171-3 86㎡ [유동화,이지은,이병훈,오대경,오대훈지분각430분의1전부]	전	228,000 228,000	물건번호1과비고 동일
2018타경 7907	1	여주시 여천동 9 810㎡	전	125,707,000 125,707,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수속포함
2018타경 8009	1	광양시 봉림면 석사리 249-1 359㎡ [연고미상분묘소재,매각제외제외시설물있음]	전	15,437,000 15,437,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8타경 52587	1	보성군 득량면 마천리 444 264㎡ [매각제외제외시설물있음]	전	3,960,000 3,9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8타경 52839	1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2425-3 1106㎡	답	13,603,800 13,603,8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자동차,중기]					
2018타경 6287	1	사동분거지:광양시 광양읍 서평5길 9, 2층 [구산리] 등록번호:20.24 [제외외건물] 4면식:2012	자동차	26,000,000 26,000,000	보관장소:순천시 중앙로345순천시 동치매매상사
2018타경 7129	1	사동분거지:순천시 지봉로 485 101동 307호 [조례동,대주아파트] 등록번호:96로807 7 차량:포터 II 파워게이트 연식:2015	자동차	14,000,000 14,000,000	보관장소:순천시 중앙로345순천시 동치매매상사
[기타]					
2018타경 7839	1	선원향:제주시 선박의종유야영장:기선 박성3001호 선장:광 흥훈수:2116년 기관의종유야영수:디젤기관 1대 추진기의종유야영수:나선추진기 1기 전수연월일:1992년10월 국적취득연월일:2002년12월27일	선박	933,920,000 933,920,000	정박장:광양항 [광양시도이동소재광양항연터버두부동동축]
2018타경 8016	1	광양시 광양읍 백동길 38 1층337.8㎡ 2층3.62㎡ 제외외건물 등 20.2㎡ [제외외건물] [공정일부,화장실]매각포함] 광양시 광양읍 옥원리 563-1 2859㎡ 동소 563-6 37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563-7 23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근린시설 공장용지 답	415,828,500 415,828,500	일괄매각,매각제외제외외건물및기타기구[툰밭참고 및목재분쇄기,컨테이너사무실,작업장]있음
2018타경 5190	1	보성군 회천면 금광길 9-43 1층97.11㎡ 2층67.28㎡ 제외외건물 등 32㎡ 보성군 회천면 군노리 961 142㎡ 동소 962-1 251㎡ 동소 967-32 66㎡ 동소 967-18 787㎡ 동소 967-33 357㎡ 제외외건물 등 6.2㎡,테크 1식	단독주택 대 대 대	563,817,760 563,817,760	일괄매각,제외외건물,수목및조경석각포함,목록8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8경목지분2분의1전부
2018타경 52174	1	보성군 회천면 금광길 9-43 77.04㎡ 보성군 회천면 군노리 967-31 86㎡	단독주택 전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상선고인이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 공공기관의 업무수행(민사집행법 제140조) 형식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패하는 경우 그 공표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순위를 형성할 수 없다.
- 매각기간: 2018. 12. 31. [월] 10:00
- 매각장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회경매법정
- 매각방법
 - 일괄매각에 비한 기밀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에 투입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 [1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밀봉투에 봉투에 기재하고 봉투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봉투를 봉인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격증명서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을 최고거래상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중에서 가장 높은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거래상선고인과 최고거래상선고인명, 제외된 다른 매수신청인명의 매수신청보증금의 총합을 즉시 반환한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결정일까지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금과 지분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금에는 동산 매각가격에 해당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간의 내용을 매각대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실시한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동산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정된 비용,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지급부서 사유없이, 따라서 매각허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 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장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장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동특세외 지장권과세를 납부한 후 동특세외수납확인서 및 동특세외수납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추적정보관리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통해 제출하면 법원이 위 기일을 속속히 처리한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주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장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매각일자 1주일 전부터 매각결정 명세서, 관할사서지소서 및 경매사서 우편통지 민사집행(선정)과에서 전자문서매각제내 비전문매각로 발송할 수 있으므로 미리 원본을 검토 받으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결정명세서의 설명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신청에 관한 사항은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요인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법원의 대리인으로 입찰하고 있는 신청인은 입찰표를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거래상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도장이용계확인증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물건에는 매각일자 전에 경매신청이 취해되거나 장점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일기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매각공고로 대체
 - 선순위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일기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로 하지 않으므로 우편통지 게시문의 공고나 법원에 비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저주자 기부를 받으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매각공고의 표시는 대한민국 법원법정명령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다량한 출찰이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명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특히 그 중의 사실상 지배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익명출찰신청하기 바랍니다. 다만, 대량출찰신청이나 순번제출의 경우를 할 수 있으므로, 관할되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일기의 공고나 비전문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17.
판사 김준영
판서 최성관